

J프로젝트·무안 기업도시 차질

광역경제권 재편 따라... 전남 역점사업 중대 변화 예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4일 전국을 5대 광역경제권으로 재편하는 '5+2 광역경제권 개발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J프로젝트와 무안 기업도시 조성사업 차질 등 지역 역점사업 추진에 중대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관련기사 3·4면〉

특히 같은 호남권역 내에 있는 전남의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J프로젝트)·무안 기업도시와 전북의 새만금 개발 계획이 그 성격상 유사해 자칫 중복 투자라는 이유로 사업이 축소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선 사업 선정시 지역간 대립마저 불어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전남은 이날 인수의 광역경제권 개발 계획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동의하면서도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역점사업들이 영향을 받아서는 안되며, 다소 중복되는 사업이 있더라도 이를 기능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전남도는 또 J프로젝트와 전북의 새만금 개발 계획이 그 성격상 유사해 자칫 중복 투자라는 이유로 사업이 축소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선 사업 선정시 지역간 대립마저 불어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특히 인수가 기존의 기업도시 정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기업도시 사업은 어떤 형태로든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따라서 무안 기업도시도 개념 및 규모 축소 등의 변화가 우려되고 있다.

전남도가 도의 명운을 걸고 뛰어든 J프로젝트 사업 역시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도가 6년째 매달려온 J프로젝트는 전북 새만금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어떤 방식으로든 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더욱이 이명박 당선인이 선거 과

정은 물론 당선 이후에도 새만금을 동북아의 두마리로 건설해 나가겠다는 발언을 자주하는 등 J프로젝트 보다 비중을 줬다는 점에서 J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건철 전남발전연구원 기획경영실장은 "이론상으로 이상적인 계획이지만 각 광역권별 기능 부여가 되지 않아 효과가 의문시된다"면서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J프로젝트와 무안 기업도시의 새만금과 기능 및 역할면에서 유사해 어떤 형태로든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얼어붙은 물레방아 23일부터 광주·전남지역을 강타한 한파로 순천시 송광면 장안리 조계산 자락의 한 식당 야외에 설치된 물레방이에 고드름이 장관을 이뤘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7일 오후부터 날이 풀릴 것으로 예보했다. /위경리기자 jrwi@kwangju.co.kr

전국 '5+2 광역경제권' 재편

인수위, 호남권 대삼각 프로젝트 등 추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전국을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대구·경북)권, 동남권 등 5대 광역경제권으로 재편하기로 했다. 강원도와 제주특별자치도는 특별 광역경제권으로 조성된다.

인수위는 23일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조적 광역발전 전략' 주제로 비공개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5+2 광역경제권' 구상을 확정, 24일 발표했다.

하지만, 이 같은 광역 경제권 구상은 인수가 그동안 비판해온 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미래 전략의

'초광역경제권' 구상을 담은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인수위 박정준 기획조정분과위원은 이날 "지역이 글로벌 체제에서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시도의 경계를 넘어 광역경제권을 확보하는 게 불가피하다"며 "지역의 지속적 경제성장과 지역간의 공동번영을 보장하고 실질적 지방분권이 이뤄지는 '창조적 광역발전' 체제를 조속히 뿌리내리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역경제권은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산업·교육·의료·문화 등 모든 분야의 기능이 결합된 인구 500만명의 경제권을 뜻하는 것으로, 지역의 인구규모와 인프라, 산업집적도, 역사문화적 특수성, 지역정서 등을 고려해 특성화된 발전전략이 추진되는 점

이 특징이라고 인수는 밝혔다.

인수위는 ▲광역경제권 연계사업의 활성화 ▲시장친화적 지역경제활성화 촉진 ▲광역경제권 기간 인프라 확충 ▲나후지역의 신발전지대로의 전환 ▲수도권과 지방의 공동발전체제 형성 ▲협력·통합·분권적 광역경제권 제도의 실천 등을 광역경제권 발전 6대 전략으로 잡았다.

인수위는 특히 각 광역경제권에 선도가반이 될 수 있는 '신성장동력거점'을 조성해 전략적 신산업기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는 신성장동력거점의 예로 새만금 세계경제자유구지와 광안만경제자유구역, 무안·해남·영암 기업도시를 연계한 호남권 대(大)삼각 프로젝트, 행정중심복합도시와 대



덕·오송·오창 등을 연계한 국제과라비즈니스벨트, 남해안 선벨트 조성 등을 제시했다.

인수는 이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기존의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재편하고 관련 부처 보조금 일부와 교부세 재원 일부, 신규재원 등으로 광역경제권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문화수도 조성사업 뿌리째 '흔들'

한나라 특별법 개정안 국책사업 용도 폐기

광주의 미래를 좌우할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지난 21일 한나라당 의원들이 발의한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하 특별법 개정안)'이 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조성위) 폐지는 물론 이 사업을 추진하는 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하 추진단)의 존립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책 사업인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미래가 불

투명하게 됐다. 〈관련기사 3면〉

특히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돼 이 사업을 총괄추진하는 추진단의 설립 근거가 없어질 경우에도 현재 대통령령으로 문광부에 소속된 추진단은 일단 존치가 가능하지만, 모법인 특별법에서 설립근거가 사라짐에 따라 향후 존치 여부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문광부는 정부조직개편단(이하 추진단)의 존립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책 사업인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미래가 불

없는 수행을 위해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특별법에는 광주시 소속으로 문화수도 조성사업의 연차별 계획을 심의·의결하는 '실시계획심의위원회'의 이름을 단순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심의 위원회'로 바꾸는 안도 있어 국책사업의 용도 폐기를 시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상호 광주시 문화정책관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성위 폐지 문제와 관련해 광주시의 기본 입장은 폐지에 반대하는 시의회 및 시민단체와 같다"고 밝혔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2010년부터 전국 모든 고교

영어과목은 영어로 수업

올해 중학교 2학년생이 고교에 진학하는 2010년부터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에서 영어과목은 영어로 수업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8면〉

또 영어 이외 과목도 영어로 수업

하는 '영어 몰입(沒入)교육'은 연내 농어촌 지역 고교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된 뒤 자율형 고교인 '기숙형 공립고'와 '자율형 사립고'에서 우선 도입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제43회 광주일보 3월 1일 광주일보창간기념대회
3.1절 전국마라톤대회

청솔이 그 꿈을 실현시켜 드립니다.

NAVER 송파청솔학원

2009 학업우수상

2009 학업우수상 수상자

2009 학업우수상 수상자